




노들장애인야학



노들장애인야학교는 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한 채 학령기가 지난 성인중증장애인들의 교육을 위해 개교하였습니다. 여기서의 교육은 '기능'으로서의 교육이 아니라 '가치'로서의 교육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교육이 장애인을 차별하는 세상을 바꾸는 데 함께하는 실천과 분리되어 진다면, '보다 나은 대안적 세상'을 향한 우리의 가치는 사라지고 '시혜'와 '기능'의 겉질로 남겨질 것입니다.

<http://nodl.or.kr>

* 이 교재는  국가인권위원회 2008년 인권단체 협력사업 아래 발간되었으며, 본 사업의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닙니다.

장애인의 인권교육교재

인권이 만사유니!

노들장애인야학

장애인인권교육교재



인권이 만사유니!

노들장애인야학

인권이야!
마련이야!

장애인인권교육교재

인권이 마려워!

나온날_ 2008년 11월

발행인_ 박경석

펴낸곳_ 노들장애인야학

만든이_ 김도현 · 김유미 · 김지연 · 박준호 · 정우준 · 좌동엽 · 최용길 · 허신행 · 이상윤(그림)

디자인_ 젊은기획 02) 2264-2015

노들장애인야학

<http://nodl.or.kr>

110-809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140 유리빌딩 202호 / 전화 02) 766-9101 / 전송 02) 2179-9108

장애인인권교육교재



인권이 마려워!

노들장애인야학

교재를 만든 경험이 없는 활동가와 단체에서 장애인권교육교재를 만드는 일련의 과정은 그리 순탄한 과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에 있어서도 그리 만족스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의 협력사업에 선정되어 사업 기간 이내에 부족하지만 교재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이라는 변명과 이제 시작이라는 위안으로 이 교재가 잘 쓰여 지길 바랍니다. 우선 이 교재는 협력단체 안에서 사용될 것입니다.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소속 단체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단체의 중증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권교육교재로 사용될 것입니다. 따라서 부록에서 필요한 관련 자료들을 첨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에선 크게 '불 끄기'와 '불 지르기'의 두 모둠으로 구성하였습니다. '불 끄기'에서는 다양한 장애인 권리 영역에서 차별 사례들을 중심으로 관련된 이야기들을 소재로 해서 구성하였고 '불 지르기'에서는 임의로 선택한 주제에 맞게 학습 목표, 주제 이야기, 생각을 드러내자!, 치열하게 논쟁하자!, 생각해 보기 순으로 내용을 구성하였습니다.

물론, 교재를 마치면서 아쉬운 점이 없지는 않으나 이 교재가 사용될 현장에서 더 다듬어지고 더 보충되어지리라는 기대감으로, 함께 펴내는 데 참여한 모든 사람들과 또한 이 교재를 통하여 장애인권교육을 만들어 가고자하는 사람들 모두가 잘 사용하였으면 합니다. 또한 이론적 내용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척박한 장애인권현실에 맞서 함께 연대하여 싸워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노들장애인야학 올림

인권이 마려워!

불 끄기. 장애가 급해! 인권이 마려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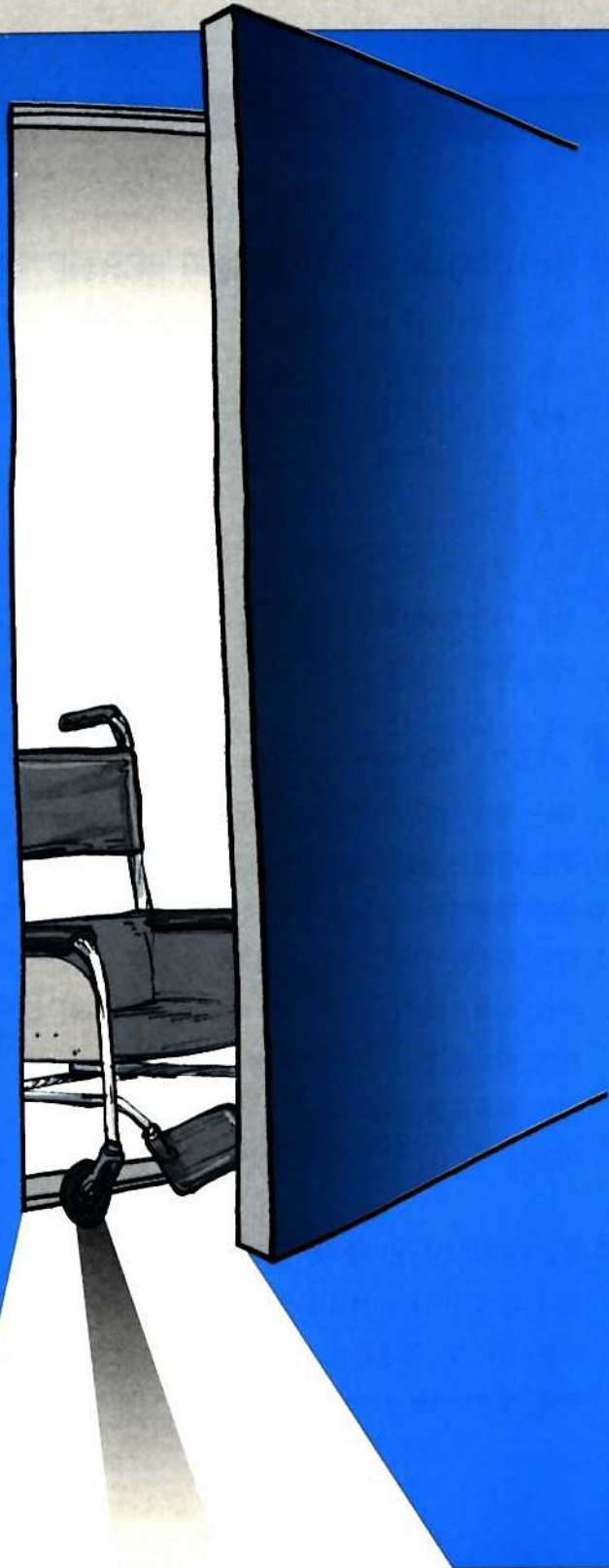
하나_ 교육이 너무 마려워!	08
두울_ 인간은 이동하고 싶다!	12
세엣_ 왜 나는 안 돼?	16
네엣_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19
다섯_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곳 그곳!	24
여섯_ 내 안에 감옥이 있다.	29
일곱_ 나는 독립을 꿈꾼다.	35
여덟_ 장애가 빈곤을 부른다.	40

불 지르기. 장애와 인권을 말하다!

하나_ 장애가 인권이 마려워!	46
두울_ 장애는 개인의 문제다?	49
세엣_ 장애인을 억압하는 무기들...	53
네엣_ 장애는 다른 사회적 차별과 맞닿아 있다.	56
다섯_ 사회가 요구하는 장애인의 이미지를 거부하라!	59
여섯_ 때로는 같고, 때로는 다르게...	62
일곱_ 합법과 불법 사이	65
여덟_ 폭력이란 이름의 두 가지 잣대	69

부록. 장애 인권 관련 읽기 자료

하나_ 장애의 사회적 이해와 장애인권	74
두울_ 한국 장애인 운동의 역사	83
세엣_ 장애인야학 운동의 기본적 정체성과 방향	96



불 끄기

장애가 급해! 인권이 마려워!

알다시피 우리 발등에 불이 떨어진 지 오래다. 학교, 집, 대중교통, 직장, 이 사회 많은 것들이 장애를 가진 몸과 정신을 거부하고 있다. '장애'란 무엇인가? 왜 '장애'를 가진 사람은 사회로부터 거부를 당해야 하는가? '장애'가 개인이 타고난 운명인 것인지, 이 사회가 만들어낸 고약한 것인지 장애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온 동네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가 깔리고, 저상버스가 보란 듯이 나타나고, 보조공학기구가 필요한 사람에게 모두 제공되고, 모든 장애인이 집을 하나씩 갖게 된다면 '장애'는 그저 차이나 개성의 문제가 될까? 어렵다. 어쨌든 우리 발등엔 이미 불이 떨어져 있다. 살아있는 동안 잘 살아야 하지 않겠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영원히 '장애'라는 꼬리표에서 해방될 수 없다 하더라도 또 다른 '장애'를 만들어내는 이 사회에 저항하는 일은 필수 불가결, 생존 필수 요건, 가장 급하고 다급한 일!임에 틀림없다.

〈장애가 급해! 인권이 마려워!〉에서는 우리를 가두는 사회, 그 단단한 벽을 깨부수는 이야기를 함께 하고자 한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요모양 요꼴'로 살아가는지 비극적인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 난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라며 지면을 구성했다. 내가 문제인지, 사회가 문제인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면 좋겠다.

영희는 교육이 어려워!

우리가 공부하는 노들야학에는 장애가 있고 나이도 있는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초딩 시절', '중딩 시절', '고딩 시절' 같은 추억할 만한 학교 이야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학교'에 다니지 못했으니까요. 우리는 왜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것일까요?

1 세상에 이런일이...

강영희 (가명, 만 28세, 여성, 뇌병변 2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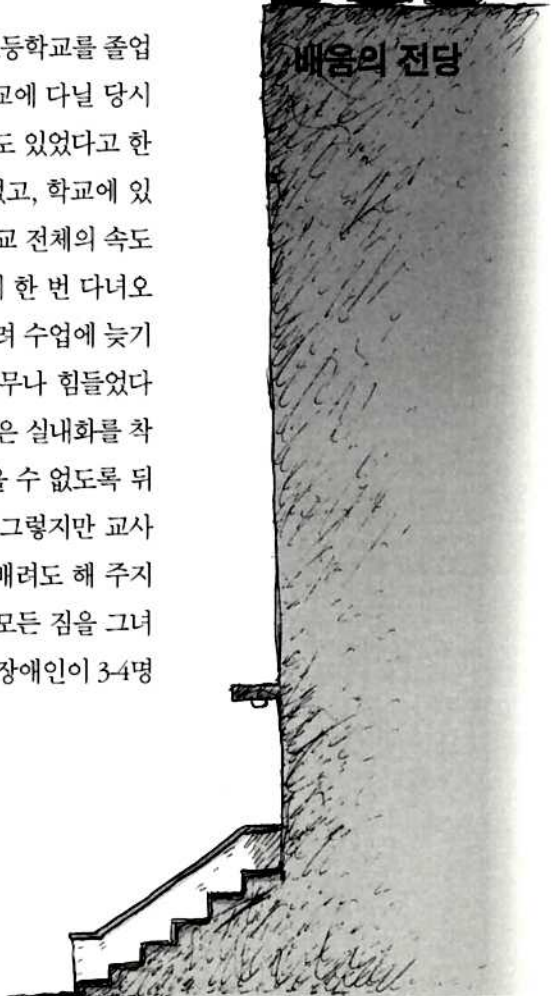
서울 00동에 살고 있는 영희는 힘들게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지금은 휠체어를 타고 다니지만 학교에 다닐 당시만 해도 부족만 해 준다면 어렵게 걸을 수도 있었다고 한다. 등학교는 어머니가 부족해서 도와주었고, 학교에 있을 때는 벽을 짚고 혼자 다녔다. 그녀가 학교 전체의 속도를 따라가기는 힘들었다. 혼자서 화장실에 한 번 다녀오는데 다른 친구들보다 2-3배의 시간이 걸려 수업에 늦기 일쑤였고, 수업 내용을 받아 적는 것도 너무나 힘들었다고 한다. 게다가 그 학교 규칙상 모든 학생은 실내화를 착용해야 했지만, 그녀의 발은 실내화를 신을 수 없도록 뒤틀려 있어 6년 동안 맨발로 다녀야 했다. 그렇지만 교사들은 그녀의 장애와 속도에 대해 아무런 배려도 해주지 않았고, 주위 친구들 또한 무관심하여 이 모든 짐을 그녀 홀로 져야 했다. 그 학교에는 그녀와 같은 장애인이 34명 더 있었지만 모두 마찬가지로 신세였다.



배우는 것은 자유다!
즉, 니 맘대로 하세요~



배움의 전당



힘들게 초등학교를 졸업했지만 중학교 진학 또한 문제였다. 중화동에 있는 중학교는 모두 버스를 타고 등학교해야 할 만큼 거리가 있었고, 어머니 또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도와주기 힘들었다. 또한 초등학교를 어렵게 졸업한 그녀에게 더 이상의 학교 생활은 생각만 해도 공포스러운 것이었다. 고민 끝에 중학교 진학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후 집에서만 지내다 17세 때 동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했지만 그곳에서도 교육을 받을 수는 없었다. 그리고 22세, 복지관을 통해 알게 된 00장애인야학을 다니기 시작했다. 그녀는 현재 고입 검정고시를 준비 중이다.

2 무엇이 문제일까?

- 1) 영희 씨가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 2) 학교나 사회에서 영희 씨에게 어떤 지원을 해주었다면 학교에 다닐 수 있었을까요? 영희 씨가 학교에 다니기 위해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봅시다.
- 3) 나는 왜 학교에 다니지 못했는지 또는 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3 알아보아요

비제도권 장애인 교육권 실태와 대책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그 교육에 의해 자신의 능력을 살리며 삶을 윤택하게 꾸려 나갈 기회를 가지고 있다. 교육은 한 인간이 그의 삶 속에서 자신의 자질을 실현하고, 주체적으로 생을 꾸려나가기 위한 기본 조건이 된다.

가. 학령기가 지난 장애인

국가에 속한 사람은 태어나 일정한 나이가 되면 헌법과 법률에 의해 의무적인 교육과 자신의 선택에 의해 고차원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에 따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한 교육의 과정을 밟고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가는 능력을 만들어 간다. 그러나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장애를 가진 사람 가운데 51.6%가 초등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 이처럼 많은 장애인들이 기본적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로 살게 되면서 사회, 경제, 문화 같은 여러 가지 면에서 열악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

이는 일선 학교를 포함한 여러 교육기관들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불편 없이 활동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고 미비한 편의시설과 제반 사회 환경의 열악함, 장애인 교육의 문제를 '특수교육'이라는 제한적 틀로만 고민했던 점 등이 그 원인이다. 때문에 장애인 교육의 문제도 전체 교육의 정상화?공공성 확대의 측면에서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교육을 받지 못한 상당수의 장애인들은 어려서부터 일선 교육기관으로부터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아 교육의 기회를 놓쳐버린 사람들이 태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함을 알 수가 있다.

나. 비공식 장애인교육기관의 양성화

학령기를 놓친 많은 장애인들은 늦게나마 자신들의 잃어버린 교육의 권리를 되찾고 교육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공간을 찾고 있다. 그러나 제도권 내 학교나 여타의 교육기관은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는 게 현실이다.

그래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비공식적인 장애인교육기관을 찾고 있으며 미약하나마 이 교육기관들은 대체적인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비공식적인 장애인교육기관으로 야학이나 자원 봉사에 의해 운영되는 공부방을 예로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들 교육기관도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많은 장애인들의 수요에 따라가지 못하며,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으며 많은 한계를 갖고 있다. 그런 면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신들이 책임지지 못한 이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들의 교육의 문제를, 비공식 장애인교육기관을 좀 더 많이 양성화 시키고 예산을 책정하는 것으로 장애인 교육 문제를 풀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장애인들에 대한 예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인 교육비용과 편의시설 확충 비용, 집과 교육기관으로 이동에 따른 접근비용과 교원에 대한 인건비 등이다.

물론 장애인교육의 본질적인 해결은 장애인, 비장애인 할 것 없이 누구나 똑같이 적절한 연령에 의무교육과 선택적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러나 그것과 더불어서 이 학령기를 지난 장애인들의 잃어버린 교육권을 되찾는 일도 동시에 전개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다. 비공식 장애인교육기관의 역할

야학 또는 공부방 같은 경우, 제도권 교육의 틀(관리 중심 행정과 입시위주 교육 등)로부터 비교적 자유롭기 때문에 그 태생에서 기인한 사회 변혁의 에너지를 실현할 가능성 또한 크다. 장애인당 사자가 장애문제에 대한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자신의 문제로 풀어 나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장애인교육기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즉, 인간교육의 실현과 장애문제 해결의 역량을 키워내는 선구자적 역할을 담당해야하는 과제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4 실천하기

1.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하거나 법에 명시된 편의시설과 환경 지원을 하지 않는 경우 교육청과 민원을 넣고, 적극적으로 싸움시다.
2. 교육 지원 문제는 결국 예산, 돈의 문제입니다. 정부와 교육청을 상대로 장애인교육 예산 확보 투쟁을 할 때 적극적으로 결합합시다.
3. 야학, 공부방 같은 장애인교육기관 후원자 조직에 관심을 두고 매진합시다.
4.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앞으로 해나가야 할 공부 계획을 잘 짜서 실천합시다.

이동하고 싶다!

장애인이동권연대, 이제 꽤나 유명한 조직입니다. 2001년 오이도역에서 수직형리프트를 이용하던 장애인 부부가 리프트 통로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이동권 투쟁이 시작합니다. 한 사건을 계기로 운동이 일어났지만 장애인이동권투쟁의 배경에는 그동안 장애를 가진 사람이 마주해왔던 무수한 계단, 차별의 벽이 있었습니다. '대중' 교통이라고 하는 버스에도 오르지 계단, 지하철역에 계단, 집에는 문턱이, 건물 입구에도 수많은 계단... 그 차별의 벽으로 인해 이 사회에 접근조차 차단당한 수십 년의 세월, 그 분노가 사회를 하나씩 바꿔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1 세상에 이런일이...

“장애인은 택시 타려면 2시간 기다리라고?”

- 요금 내린 장애인콜택시, 이용 더 불편해진 까닭 -

“전남 광주를 다녀왔다. 광주역에서 용산역까지 KTX로 3시간이 걸렸다. 그런데 용산역에서 서울에 있는 집으로 올 때에도 3시간이 걸렸다.”

김주영 성동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휠체어로 이동해야 하는 장애인이다. 그는 최근 용산역에서 3시간 동안 장애인콜택시를 기다린 후에야 집까지 돌아올 수 있었다. 그는 “서울 시내에 있는 집까지 3시간이 걸린 건 집이 용산역과 광주만큼 떨어져 있어서였나 보다”고 비꼬았다.



요즘 서울시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려 콜센터에 신청을 하면 평균 2시간을 기다려야 한다. 4시간까지 기다린 이들도 있다. 장애인콜택시 이용 요금이 저렴해져 이용 장애인들이 폭증했기 때문이다.

이에 장애인들이 장애인콜택시 대수를 늘려줄 것을 서울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소속 장애인 30여 명은 지난 24일 서울특별시청 서소문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장애인의 현실적 교통 수단은 '장애인콜택시' 뿐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중 교통 수단은 크게 3가지다. 저상 버스, 지하철, 장애인콜택시. 하지만, 그 중에서 장애인들이 편의와 이동성을 고려해 현실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 수단은 장애인콜택시 뿐이다. 이들이 긴 시간을 기다려 장애인콜택시를 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최강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동권위원회(준) 활동가는 “저상 버스가 도입됐다고는 하지만, 일단 버스 대수가 너무 적어 이용이 거의 불가능하다”며 “또 좁은 인도에 있는 나무 때문에 휠체어의 이동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장애인을 발견하지 못하게 해 운전 기사들이 우리를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박현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도 “지하철을 타고 환승할 때마다 엘리베이터가 어딘지 몰라 헤매기 일쑤고, 엘리베이터까지 가기도 힘들다”며 “목적지까지 가는데 드는 시간은 거의 다 환승에 쓰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여전히 대부분 역사에 리프트가 많아 엘리베이터 이용도 어렵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실은 장애인들의 발을 여전히 묶고 있다. 대중 교통을 이용해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야 하고, 심지어 가지 못하는 여건에서 목적지 바로 앞까지 이동할 수 있는 장애인콜택시는 실질적으로 유일한 ‘발’ 인 셈이다.

〈프레시안〉 2008년 9월 25일, “장애인은 택시 타려면 2시간 기다리라고?”

2 무엇이 문제일까?

1. 지하철이나 버스를 두고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저 편안해서입니까?
2. 장애인콜택시를 비롯해 버스,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불편했던 점을 속 시원히 이야기해봅시다.
3. 가고 싶은 곳에 마음대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모조리 쏟아내 봅시다.

3 알아보아요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

인간이 역사를 써 나가기 시작하기 전부터 먹이를 찾기 위해 어디든 이동할 수 있었다. 자연을 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역사를 쓰기 시작하고 나서는 유용한 이동 수단을 끊임없이 개발해, 인간은 이제 지구 모든 곳을 이전보다 훨씬 빨리 그리고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근대 시민혁명은 인간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천부적 인권으로 파악하고 이를 자유권의 하나로 인정해, 법률상으로 보장하도록 강제했다. 이제는 인간이 어디든 마음대로 이동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억압과 차별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기술적으로 법적으로 모두 보장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러한 자유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 의미로 적용되지 않았다. 교통수단이 발달할수록 장애인들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설계된 교통수단에 자신의 몸을 맞추어 했고, 오히려 놀라운 교통수단의 발전 때문에 장애인들은 이동에 대한 욕구와 현실 사이에 괴리감만 느껴야 했다.

하지만 평등의 이념을 구현하려는 권리로 이해되고 있는 사회권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들이 국가적 프로젝트로 실천되어지면서, 지난 20여 년 전부터 미국, 일본, 영국, 스웨덴 같은 일부 선진국에서는 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특히 지난 1983년 유엔 총회에서 채택한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의 접근권에 대한 규정 및 이를 보장하도록 권고한 것이라든지, 영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접근위원회 설치(England Access Committee)한 것, 11년이나 걸려 만든 미국의 ADA(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법의 제정(1990), 장애자(障害者)플랜을 통해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책의 일환으로 만든 일본의 교통베리어프리법을 제정(2000)한 것 등에서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세계적 노력을 주목할 만하다. 이제는 캐나다에 가면 시내에 투입된 노선버스 2대 중 한 대 끝은 저상버스임을 발견할 수 있고, 일본에 가면 이동할 때 활동보조인을 정부로부터 제공받아 원하는 곳을 마음대로 이동하는 장애인들을 볼 수 있다.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국가 차원에서 논의되고 그에 관한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 지금, 한국의 장애인들은 집밖으로 나오는 것조차 어려워 국민이 누릴 수 있는 다양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매일 외출할 수 있는 장애인은 전체의 59.6%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를 뒤집어 해석하면 전체 장애인의 약 40%는 원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은 실제 집밖 활동 시 전체 조사자의 65%가 불편한 것으로 응답했고, 불편한 원인으로 대중교통수단이 불편하기 때문(52%) 등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대중교통수단 이용이 불편해 집밖 활동을 원만히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외출 횟수를 점차 줄여야 하는 장애인의 현실, 이것은 나아가 장애인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노동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같은 여러 가지 사회적 권리를 주장하고 누리는 과정에도 막대한 타격을 가한다.

4 실천하기

꼭 해봐요! 필수과목

계단만 있는 지하철 역사, 계단만 있는 버스만 매일 만나는 동네에 살고 있다면 동사무소, 시청, 구청, 정부기관 같은 곳에 연락해 나의 불편함을 속속들이 고해줍니다. 가급적 자주하되 계단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게 좋겠지요?



선택과목_하거나 말거나



우리 동네에 교통 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행정기관의 꼭대기 책임자에게 장애체험 행사를 제안합니다. 전동휠체어 타고 휠체어리프트 타기, 시민 여럿 손에 들려 계단 오르내리기, 잘 오지 않는 저상버스 기다리기 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일들을 프로그램으로 구성합니다.

왜 나는 안 돼?

두 발로 걸어 다니는 친구와 휠체어를 굴리며 다니는 내가 극장에 갔습니다. 역시나 극장 안이 온통 계단입니다. 이제 놀랍지도 않은 일입니다. 나는 오늘도 맨 앞자리 출입문 근처에 앉아 고개가 빠근하게 영화를 봅니다. 극장에 함께 갈 친구도 점점 떨어져나갑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뭔가 방법이 없을까요?

1 세상에 이런일이...

우리 애는 정신지체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다행이 두 다리가 멀쩡한 관계로 계단은 자유로이 다닐 수는 있습니다. 허나, 정신지체가 됩니까? 지능이 낮은 관계로 정신이 육체를 통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즘 도시 가정 가운데 서양식 화장실(좌변기)을 갖추지 못하고 사는 가정은 소수를 제외하고 찾아보기 힘듭니다. 일반 초등학교 즉 우리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 장애인 화장실이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자주 바지에 똥을 싸 오길래 제가 특수학급 앞에 있는 화장실에 들어가 봤습니다. 장애인화장실이 분명 따로 있더군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온갖 잡스러운 것들을 넣어두고 그 화장실을 폐쇄하고 있었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이 무엇입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야 하는데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어린 아이 다리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틈밖에 없었습니다. 이왕 만든 화장실을 실용적으로 사용하게끔 관리하는 일이 필요한데 이 학교는 장애인화장실을 만들어 놓고도 사용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 인천에서 장애아를 키우고 있는 부모의 이야기



2 무엇이 문제일까?

1. 급하게 공공화장실에 들어갔는데 변기가 있는 화장실 안까지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내가 장애인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일까요 아니면 화장실이 잘못된 걸까요?
2. '장애인용 화장실' 표시를 보고 화장실을 찾아갔는데, '남녀공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남녀공용' 화장실을 만난 당신의 기분을 이야기해봅시다.
3. 장애인화장실 외에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하고 싶었던 일을 못했던 경험을 이야기해봅시다.

3 함께 풀어 볼까요

편의시설과 접근권의 의미

배용호(장애인편의시설추진시민연대 연구실장)

장애인이 인간답게 살고, 자유롭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이와 함께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즉, 인식의 장벽과 물리적인 장벽이 제거되어야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평등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인식의 장벽이란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오해 그리고 차별 등을 의미한다. 장애인은 무능력하다, 장애인은 성격이 이상하다, 장애인은 불행하다, 장애는 죄의 결과다 등과 같은 편견과 오해들은 결국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을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차별은 학교나 직장에서 장애인을 거부하는 것과 같은 직접적인 차별로 나타나게 된다. 실제로 대부분의 장애인들은 우리 사회에서 직접적인 차별과 간접적인 차별을 많은 적든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차별로 인해 장애인은 더욱 더 장애를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

편의시설은 인식의 장벽과 물리적인 장벽 가운데 물리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방법이다. 장애인이 잡 밖으로 나가 사회에 참여하고 사회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집(주택)에서부터 도로, 건물, 교통수단, 통신시설 등에 비장애인은 물론이고 장애인도 자유롭게 안전하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가 바로 편의시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의시설이 설치된다고 해서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자유로운 이동과 건물에의 접근, 교통수단의 이용, 자유로운 통신, 정보의 이용 및 교환, 완전한 사회참여가 보장되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보장되고 지켜지며, 그것을 통해서 장애인이 자유롭게 이동하고 편리하게 건물과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정보를 교환하고 정보를 얻으며, 자유롭게 동등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들이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로 인정이 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규정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지켜져야 가능해질 수 있다. 그 권리가 바로 접근권(rights to access)이다.

1.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에 민원을 넣읍시다.
2. 모욕이나 좌절감을 안겨준 시설물을 사진에 예쁘게 담아 두고, 차별 진정서를 작성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합시다.

나도 하고 싶은 게 있어!

장애인도 문화생활을 즐기고 하고 싶은 걸 꿈꾸고 싶어 한다. 하지만 장애인이라서, 장애인이기 때문에 넘어야 하는 장벽은 너무나 많다. 또한 생존권도 보장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장애인 문화를 이야기하는 건 배부른 소리같이 들리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도 인간이기에 하고 싶은 걸 꿈꾸고 싶고 이루려 한다. 과연 불가능한 것인가? 장애인 문화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어 보자.

1 어떤 일이?

장애인이 예술 활동하면 인간승리?

문화소비자 권리 박탈...생산은 꿈도 못 꾀

"장애인 문화권 찾자"...본격 토론 시작

"장애인 당사자들이 모여 문화정책 생성을 하는 경우가 최근 들어 활성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보는 문화에서 탈피하고 찾아가는 문화, 당사자의 실천적 문화, 일상적인 문화가 진정한 장애인 문화향유라고 할 것이다."

장애인문화공간이 지난 21일 문화연대와 함께 서울 서대문 한백교회에서 개최한 '장애인 문화권리 확대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장애인이 단순한 문화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화 참여자로 나서야 하고, 더 나아가 장애인 스스로가 자신의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날 발제를 맡은 장애인문화공간 최재호 대표는 "대부분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을 사회적·문화적 동반자로 인식하기보다는 장애인을 일방적인 문화적 시혜와 동정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 공연장에 앉아 멍하니 전문예술인의 공연을 바라보며 박수만 치는 장애인들의 현실과 장애인이 문화표현을 하면 '인간승리'라고 생각하는 의식이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은 '특수한 단순 문화소비자'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나마도 문화소비자로서 문화를 즐기기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최근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장애인 2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장애인 문화욕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0%가 한 달에 한번 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한

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었다.

조사 응답자들의 대부분은 문화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로 경제적 어려움, 교통 및 편의시설의 미비 등을 들었다. 최 대표는 "무엇 하나 제대로 배우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찾기가 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렵다. 설사 어렵사리 공간을 찾았다해도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 때문에 장애인들이 문화를 접근하기에 어려운 현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에 최 대표는 "이제는 장애인들도 적극적인 문화 참여자로서, 생산적 문화 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자분이 만들어 놓은 소비위주의 문화를 생산적 문화로 바꿔나가고 장애인들의 문화적 욕구와 왜 창출하고 싶어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하나 이끌어내어 세상 밖으로 알려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 대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자신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갈 줄 아는 공간을 만들면 얼마든지 문화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를 위한 정책적 기반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애여성과 문화'에 초점을 맞춰 발제를 진행한 장애여성공감의 박김영희 대표는 '장애인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즉 차이를 드러내는 방식을 통해 기존의 비장애인 중심의 기득권 문화를 깨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가 속해있는 장애여성공감의 연극팀 '춤추는 허리'는 다양한 장애를 가진 장애여성들이 배우로 출연해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에 장애여성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로 3회째 공연을 진행했다.

박 대표는 "장애여성의 몸이 무대위에서 자유롭고 당당한 것처럼 일상에서도 당당하고 자유로웠으면 한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깝게는 내 곁에서 또 거리에서 다양한



장애여성들의 몸이 자연스럽게 보여지고, 익숙해지기 위해서는 장애여성의 삶이 더 많이 드러나야만 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특히 "빠르지 않아도, 정확한 발음이 아니어도 잘 짜여진 계획된 구성이 아니더라도 장애여성의 사회적 위치와 자신을 증명하고 내면을 표현해내는 것이라면 그것이 장애여성의 문화라고 할 수 있다"며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감각으로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끝으로 "장애여성의 관점으로 창조된 문화는 기존의 기득권의 문화를 깨내어야 한다"며 "그것은 정상성의 경계를 넘어야만 가능할 것이다. 그러기 위한 노력은 많은 장애여성의 경험이 드러나야만 할 것이다. 무엇보다 장애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에이블뉴스 김유미 기자 (ablenews@ablenews.co.kr)

2 무엇이 문제일까?

1. 장애인 문화에 대한 욕구가 사치스러운 것일까요? 아니면 당연한 것일까요?
2. 사회에서 장애인 문화를 가로막는 주된 이유들이 무엇인지 이야기 해보아요.
3. 장애인 문화를 활성화시키려면 어떻게 했을 때 가능한 것일까요?

3 알아보아요

“장애인 스스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따스한 오월 속에 마음에 여유를 갖고자 잠시 여가생활을 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때 무언가 장애인 머리속에 강하게 때리는 느낌을 느끼고 한다. 문화의 향유를 즐기고자 또한 참여하기 위해 거리로 나오지만, 장애인으로서 느끼는 체감의 온도는 싸늘하기 때문이다.

장애인문화는 문화의 사각지대에서 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청각장애인은 음악회에 갈 수 없고 시각장애인은 영화를 볼 수 없다. 지체장애인은 거리로 나서는 온통 걸림돌 투성이다. 장애인의 열악한 경제사정도 문화예술을 누리기 힘들게 한다. 결국 대부분의 장애인들이 문화생활을 즐기지 못하는 것을 자신의 문제로만 인식하면서 살아간다.

‘장애인문화’, 문화에 대한 편견이 대부분 그러하듯,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장애인’이라는 사회적 소수자 뒤에 ‘문화’라는 단어를 덧붙이는 것에 대해 ‘부차적이거나’ ‘사치스럽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과 문화의 관계라는 것이 몇몇 알려진 ‘장애인 예술가’ 또는 ‘장애인의 취미 활동’ 정도로만 치부되고 있으니 크게 놀랄만한 반응도 아니다.

장애인문화생활은 대부분 여가시간을 주로 TV시청이나 집안일을 하면서 소일정도 하는 일뿐 여타의 문화생활이나 여가활동은 여건의 미비로 인하여 부진하다.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로 인해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외 계층들의 문화생활은 한정된 공간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제한적인 문화여건이 조성되어 있어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장애인은 약145만명. 그러나 이는 공식 수치이고 비공식으로 추정되는 장애인 인구는 450만명이다. 2000년 ‘장애인 문화욕구 실태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28.7%가 문화 활동을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영화6.8%, 스포츠4.8%, 전시·공연장 8.2%등) 2005년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장애인 202명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문화욕구 실태조사에서도 장애인의 문화활동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서 한달에 3번 이상 문화활동을 즐기는 장애인은 전체 응답자의 16.5%였다. 또한 장애인의 60%가 한 달에 한번 문화활동에 참여하거나 혹은 한번도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95%가 문화활동 참여 의사를 밝혀 문화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는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문화향유는 필수도 아니고 선택도 더욱 아니게 되었다. 일방적이고 주입식인 문화가 지금의 ‘장애인문화’이다. 2005년 장애인 문화욕구 실태조사에서 장애인의 28%가 가장 참여하고 싶은 문화활동으로 ‘여행’을 꼽았지만 6개월간 ‘여행’ 활동을 했던 사람이 7%에 불과한 것을 보면 장애인문화가 얼마나 일방적인지 알 수 있다.

선택권이 없는 수많은 시설속에 있는 장애인들은 간혹 특별한 행사 때마다 베풀어지는 여러 가지의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공연과 나들이, 동정과 시혜를 베푸는 이들에게 사진 한번 품 나게 찍어 주고 한날 신나게 놀다가 때가 되면 또다시 갇히어 언제 또 베풀어질지도 모를 동정과 시혜의 나날

을 무작정 손꼽아 기다려야 하는 삶을 산다. 이렇듯 장애인들의 지금까지에 삶은 이렇게 일방적 주입식 문화였다

이동, 교육, 노동, 문화, 그 중 문화가 장애인 입장에서 가장 올라가기 힘든 나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다. 수많은 나뭇가지가 함께 어울려 있는 한 나무에 다양한 문화들은 저마다 즐기고자 지를 흔들지만, 장애인은 나무만 쳐다 볼 뿐이지 어떤 문화인지조차 모르고 만다. 알아야 경험이 쌓이고 그러한 경험으로써 자기의 삶이 누릴 수 있는 문화로 될 텐데 그러하지 못하는 세상의 구조적 모순, 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편견의 문화정책만이 있다.

이제는 장애인 스스로가 문화정책을 생성하는 적극적인 문화의 참여자로서 자신들의 생산적 문화정책활동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또한 문화에 대한 인식과 활동 속에서 소외받고 차별받았던 장애인들의 모든 것들이 숨김없고 가감없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와야 한다.

이렇듯 자본이 만들어 놓은 소비적인 상업문화와 장애인에 대한 소외로 일관되는 문화구조의 질곡을 걷어내고, 생산적·진보적 문화정책에 대한 깊은 고민과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문화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그저 집안에 웅크린 상상 속에서나 느낄 수 있는 문화, 결국은 소외된 문화로 갈 수 밖에 없는 현실들을 단호히 거부하고, 450만 장애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장애인문화를 건설해야 한다.

앞으로 문화정책과 실천적인 활동을 통해 장애인이 더 이상 문화적 착취와 소외의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화생산자이자 진보적 문화운동의 주체임을 분명하게 확인시켜 나아가야 하고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 자체를 오직 시혜와 동정의 시선으로만 바라보려 하는 이 사회의 잘못된 시각을 송두리째 뿌리 뽑고, 자본이 만들어놓은 일상문화와 힘차게 싸워 나가야 하며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누구나 자신을 위한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정책적 기반건설을 해야 한다.

장애인 문화운동의 출발점은 고급스럽고 화려하게 포장된 소비중심의 문화가 아닌, 장애인의 요구에서 출발되는 ‘문화’, “장애인 스스로 즐기고 느낄 수 있는 문화가 절실히 필요하다.”

4 실천하기

1. 미술, 사진, 조각, 연극, 영화, 음악, 춤 등 문화와 관련된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가합니다. 금전 여유가 없는 사람들은 장애인문화바우처 사업을 이용합니다.
2. 표현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표현해봅시다. 사회 평균치의 목소리, 몸짓, 감정이 아니라 해서 부끄러울 것 없습니다.
3. 접근성이 떨어지는 문화시설물을 만났을 때, 공공시설물의 경우 차별을 경험해 가슴이 아팠다는 내용의 편지를 작성해 책임자에게 보냅니다. 유료시설물의 경우 장애인할인제도를 요구합니다. 똑같은 요금을 내고 덜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한 자본주의적인 깔꼼한 계산법입니다.

보이지만 갈 수 없는 곳!

노들야학 학생 가운데 '직업'이라는 것을 가진 사람은 손에 꼽힐 정도입니다. 시장이 요구하는 노동을 물리적으로 할 수 없는 몸들이 있고, 비장애인과 경쟁에서 밀려 일하지 못하는 몸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사회공공성이 약한 이 나라에서 '직업'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은 '돈'을 가지지 못하는 문제이고, 이는 '직업을 통한 일정 정도의 자아실현'이 좌절되는 것을 넘어 먹고 사는 것이 불안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1 어떤 일이?

국가인권위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실태 조사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서 취업과 승진은 비장애인 보다 어려운 반면 징계나 해고는 비장애인보다 쉽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대상 업체중 93.8%가 채용과정에서 차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가 인권상황 실태조사의 일환으로 조사하여 10일 공개한 '장애인고용 및 승진실태조사'에 따르면 인터넷에 구인광고를 낸 455개 모집 회사 가운데 93.8%인 427개 업체가 채용과정에서 연령제한 등의 직, 간접적 방식으로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고 신체조건 표기(70.5%), 시험이나 면접시 장애인에 대한 배려부재(98.9%), 인터넷 서류 접수시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부재(82.2%) 등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은 취직을 위한 면접에서 50.7%가 '장애가 있음에도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차별적인 질문을 받고, 특히 여성장애인의 경우 34.8%가 '결혼 후 직장생활 여부'에 대한 질문을, 27.3%는 '장애인으로서 직장생활과 육아 등을 공유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여성장애인들은 면접 시 남성장애인에 비해 차별을 더 심하게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입사시험에서도 장애인의 82.4%가 적절한 배려조치가 없어 불이익을 경험한 것으

로 답했는데 구체적으로는 대필 및 시간배려부재(82.4%)나 편의시설 미비(71.2%) 외에 상이한 합격기준을 적용한 경우(23%)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진이나 승급에 있어서 장애인들의 22.5%가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채용 시 직급배치 차별을 당했다'고 응답한 장애인의 비율은 17.8%였다.

직무배치의 경우 3백인 이하 개인회사의 단순노무직 여성장애근로자가 가장 심각한 차별을 경험하고 있었으며 발달장애 및 정신지체 근로자의 상황도 열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임금차별을 경험한 장애인 근로자는 23.3%였으며, 육아 및 산전후 휴가 등에서 차별을 당한 여성장애인 근로자는 31.4%였다.



장애인 근로자의 67.9%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는 장애인들이 차별을 공적인 문제로 판단하기보다는 개인이 감내해야 하는 문제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해고 및 퇴직단계에서 차별은 79.1%

장애인에 대한 해고 및 퇴직 단계에서의 차별은 조사대상 업체의 79.1%가 신체기능 및 정신상의 장애를 이유로 직권면직이나 해고·퇴직 규정을 인사규정에 포함하고 있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상의 복직규정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퇴직 시 비(非)장애인근로자와 다른 정년 제도를 두거나(11.3%) 인원감축이

나 정리해고시 장애가 우선적으로 고려(15.2%)되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여성장애인이거나 정신지체, 뇌병변장애인의 경우, 정년감원이나 해고시 차별이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장애인 고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장애인 관련 각종 편의시설 설치율은 공장이 44.0%, 터미널 39.5%, 학교 45.8%, 일반 업무시설 41.8% 등으로 나타나 50% 이상의 비율을 보인 곳이 없을 만큼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개인이나 고용주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

이번 조사를 담당한 국가인권위원회 연구담당관실 안상희 사무관은 “이번 조사결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장애인에게 취업은 어렵지만 해고는 쉽다는 것”이라며 “장애인 고용평등권 보장을 위해서는 장애인 개인이나 고용주의 노력 뿐 아니라 사회적 인프라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사무관은 “이번 연구는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을 인권의 관점에서 재조명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차별행위와 아울러 연령 등 다양한 제약조건을 활용하는 ‘결과적 차별’(실질적 차별)이라는 문제를 구체화한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향후 정부의 장애인 노동권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안 사무관은 “특히 주목할 것은 기존의 차별이 아직도 존재하는 가운데 연령이나 다른 교묘한 방법으로 취직이나 승진에 불이익을 주는 ‘결과적 차별’이 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이고 “앞으로 단순한 장애자 복지가 아니라 차별철폐와 고용평등의 차원에서 이 문제가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는 이번 조사가 장애인 5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455개 업체의 인터넷 구인광고를 검토했으며, 22개 업체의 인사규정을 수집하여 공무원 규정과 비교·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취업연령 제한에 따른 장애인 고용차별 사례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경우 재활치료나 편의시설 미비 때문에 취학을 연기하거나 재학 도중 휴학을 해야 하는 경우가 74.5%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제한’이 장애인 취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 2003년 2월 11일. “국가인권위 장애인에 대한 고용차별실태 조사”

2 무엇이 문제일까?

1. 당신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다면 어떤 일을 하는지 소개하고, 하지 않는다면 왜 하지 않는지 이야기해봅시다.
2.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일과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3. 고용주 입장에 서서 장애인 고용 문제를 고민해봅시다.
4.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생각해봅시다.

3 천천히 함께 읽어오

장애가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 사회를 위하여

엄밀히 말하면 한국사회에 장애인 노동정책은 없다.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관리하고 감시해야 할 국가기관부터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부담금으로 면죄부를 받고 있다. 취업훈련을 받은 장애인노동자의 대부분은 다시 실업자로 전락하고, 그나마 운 좋게 고용된 장애인노동자는 저임금, 장시간노동 그리고 불법해고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학을 졸업한 휠체어를 탄 어떤 장애인노동자는 요즘 취업을 포기했다. 수십 차례 입사 원서를 집어넣었고 이 회사 저 회사를 찾아 다녀보았지만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려는 기업은 없었다. 몸이 뒤틀리고 휠체어를 타기는 했지만 오직 취업을 하겠다고 외국어와 컴퓨터를 공부하고 학업성적도 우수하지만 그는 여전히 실업자다. 지금 대학 졸업반인 한 뇌성마비 대학생은 나를 보면 매번 같은 질문을 한다. “형! 나 졸업하면 취업할 수 있을까?”

자본과 국가는 끊임없이 그리고 계획적으로 장애인을 사회와 격리시키고 열등한 존재로 만든다. 그리고 모든 것이 개인의 운명이고 개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한다. 과연 어디 그런가?

장애는 절대적 개념이 아니라 상대적 개념이다. 장애는 특수한 조건과 상황에서 발생한다. 만약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아무 불편함이 없이 노동을 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노동의 현장에서 장애인이 아니다. 문제는 장애인이 노동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기커녕, 끊임없이 억압하고 차별하기 위해 자본과 국가가 만들어 놓은 사회 경제적 구조가 노동의 현장에서 장애인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노동자의 대부분은 자신이 노동을 할 수 없는 것이 자신의 장애 때문이라고 생각

모든 인간을 자유를 원한다

“산 좋고 물 좋은 곳에서 편안하게 살다 가는 게 낫지 않겠어?” 많은 수의 세상 사람들이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을 만나면 이런 이야기를 내던지곤 한다. 장애를 가진 그 몸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여러 사람 고생시키지 말아라, 그런 속내가 훤히 비치는 말이다. 사회복지시설, 흔히 시설이라고 불리는 곳에서 살았던 또는 살고 있거나 또는 살게 될지도 모르는 중증장애인들이 우리 곁에 있다. 경험으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진실 혹은 거짓을 들여보자.

1 어떤 일이?

“나를 고쳐야 하나, 사회를 고쳐야 하나?”

참았던 말은 끊임없이 쏟아졌다. 순서가 이미 다음 차례로 넘어갔는데도 다시 마이크를 움켜잡고 못 다한 말을 이어가는 이도 있었다. 발언은 때로 호소로, 분노로, 또는 울먹임으로 마무리됐다.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이상 가슴에 묻었던 사연을 온전히 말로 풀어내기에 5분은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다. 들어주는 이도, 말할 기회도 없던 이야기였기에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이들은 석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김포 석암베데스다요양원(석암요양원)에서 10~20년 이상 생활해온 장애인이었다. 10일 서울시청 앞에서 ‘사회복지시설 비리 척결과 탈시설 권리 쟁취를 위한 공동 투쟁단’ 주최로 열린 ‘탈시설을 위한 시설생활인증 연대회’에 참석한 10명의 석암요양원 생활인은 스스로의 목소리를 통해 시설 내 생활을 알렸다. 비리, 인권 침해 등 일명 ‘시설 비리’라 불리는 문제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에서 생활하는 이들이 이렇게 직접 나선 건 사실상 처음이었다.

석암재단은...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을 비롯해 3개의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복지재단인 석암재단은 지난해 한규선 씨 등 시설 내 생활인을 통해 각종 문제가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한다. 어느새 장애인은 노동능력자라는 이데올로기를 장애인노동자들이 스스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허무주의를 극복하고 장애인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해 활동하는 조직이 있기는 하지만, 인적 물적 토대가 너무나 취약하다. 그렇다고 싸우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조직된 노동자나 다른 집단이 싸워주기는 만무하다.

그러나 최근 장애인 이동권 쟁취를 위한 투쟁은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처음에는 소수의 투쟁이었지만 장애인을 차별하고 억압하는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비타협적인 투쟁이 점점 많은 장애인들을 투쟁에 결합시킬 수 있었고 투쟁의 과정에서 장애가 아니라 사회구조가 원인이고 자본과 국가가 끊임없이 이러한 구조를 만들어내고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장애인 스스로가 인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많은 사회 노동단체가 함께 투쟁에 결합하면서 연대의 중요성도 새삼스럽게 확인 할 수 있었다.

지난 이동권 투쟁의 기억과 어느 해고된 장애인 노동자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생각하며, 장애인노동자가 노동시장에서, 노동현장에서 그리고 일상적인 삶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은 결코 저항하고 투쟁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장에 다니면서 가장 좋았던 기억들은 직장 동료들과 회식하던 자리, 급여를 받아 이제 세 돌이 갓 지난 아이의 장난감이나 과자 한 봉지 사가 지고 집에 들어갈 때, 그리고 당당한 사회인으로 세금(무척 아깝지만)을 낼 때 행복을 느꼈습니다.”

(어느 해고된 장애인노동자의 편지 중에서)

4 실천하기

1. 구직 과정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경험했다면 진정서를 작성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하고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에 도움을 요청합시다.
2. 장애인고용촉진법이 보다 더 실효성 있는 법이 될 수 있도록 법 개정 운동에 동참합시다.
3. 경쟁력과 효율성을 강조하는 조직보다 가치 실현, 사회 윤리 같은 것을 강조하는 조직에 관심을 두고 구직활동을 합시다. 쉬운 일이 아니니 인내를 가집시다.

이들 시설은 지난해 3월 서울시 감사 결과 회계서류를 허위로 작성해 횡령하는 등 모두 1억700만 원의 장애수당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매달 국가가 장애인 개인에게 지급하는 장애수당을 시설에서 임의로 사용했던 것이다. 관할청인 양천구청은 이를 환수조치 했다.

재단을 설립했던 이부일 전 이사장은 지난달 6일 보조금 횡령, 사회복지사업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과 인척 관계인 제복만 현 이사장을 비롯해 시설장 2명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규선 씨를 비롯해 석암요양원 생활인들과 장애인단체로 구성된 '석암재단 비리 척결과 인권 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3월 25일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법인설립허가 취소와 시설생활인의 탈시설권리를 요구하며 노숙 농성을 벌이고 있다.

“지금까지 죽어서 살아왔는데,
한번 죽지 두번 죽나요?”

김진수 씨(59)는 “우리나라가 이제는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1980년대 후진국을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우리에게겐 누려야 할 행복이고 권리”라고 강조했다.

“밖에도 마음대로 나갈 수 없었어요. 사회 적응 훈련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두번 정도만 나갈 수 있었어요. 맨날 방에만 누워있었죠. (...) 사실 지금도 선생님은 가지 말라고, 농성 하러 다니고 자고 그러면 몸 상태가 더 굳어진다면서 말리세요. 하지만 내 몸 안 좋으면 전화하겠다고 그러고 나와요. 지금까지 죽어서 살아왔는데, 한번 죽지 두번 죽나요? 사실 시설에서 절대 살고 싶지 않아요. 갈 곳만 있으면, 주거지라도 있으면 어떻게든 나와 살고 싶어요.”

김동림 씨(47)는 중학생 시절 교통사고를 계기로 자신이 유

전병인 뇌위축증을 갖고 있음을 알게 됐다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만 생활하던 그는 아버지로부터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는 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자진해서 시설에 들어갔다고 했다. 그러나 그가 정작 시설에 들어와 마주친 것은 견딜 수 없는 구속이었다.

25살이던 1987년 석암요양원에 들어온 김 씨는 지적 장애 등을 가진 50~60대 장애인 5명과 함께 한 방에서 생활을 해야 했다. TV 하나를 보기 위해서도 방을 나와 휴게실에 가야 했지만 그것조차 일일이 보고를 해야 했다고 한다.

그는 “비록 시청 앞에서 잠을 자고, 하루 종일 사람들에게 서명을 해달라고 말을 하다 보면 입이 열고 목이 아프다”며 “하지만 여기엔 자유가 있다”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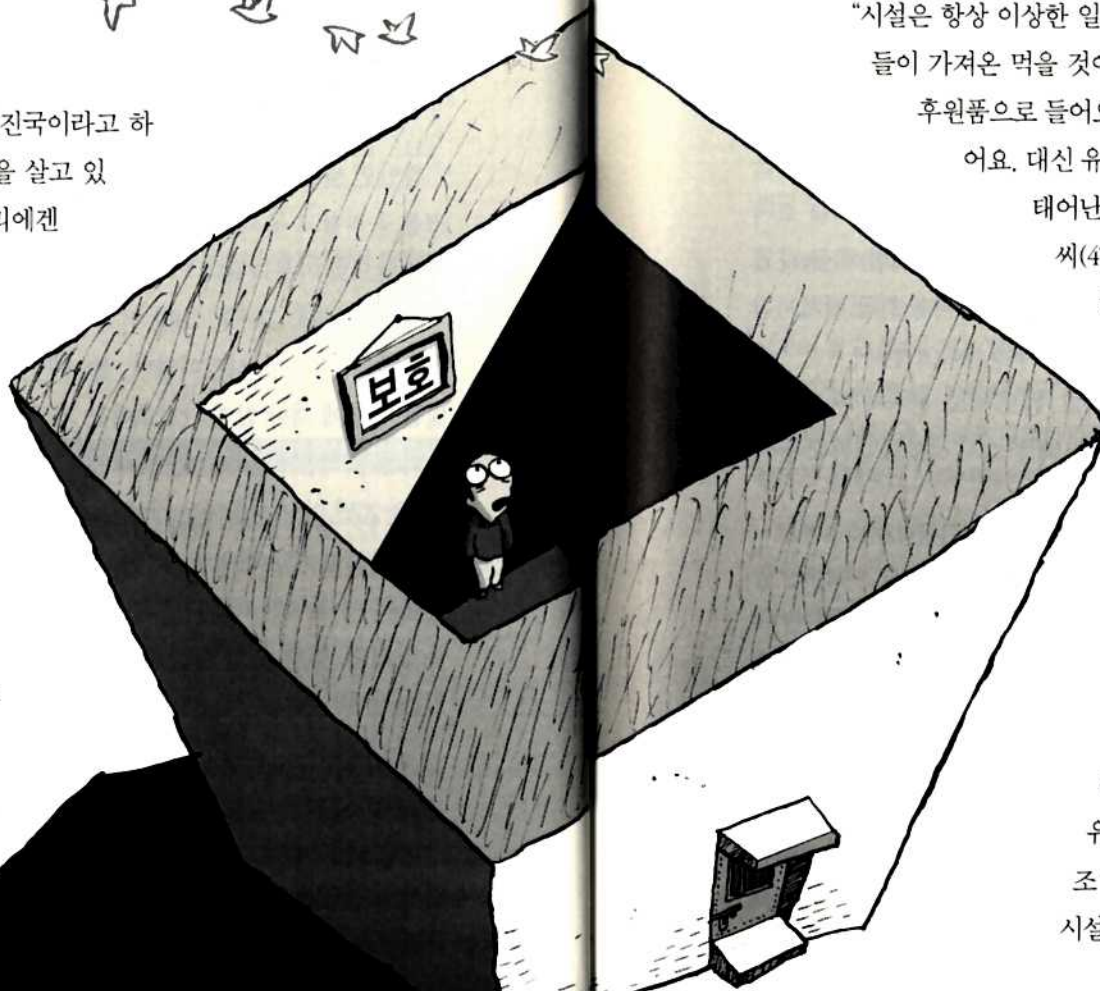
“시설은 항상 이상한 일 투성이었다”



“시설은 항상 이상한 일 투성이었어요. 손님들은 분명 왔다 갔는데, 그 사람들이 가져온 먹을 것이나 후원품은 주지 않았거든요. 나중에야 알았는데, 후원품으로 들어오는 물건을 바로 주지 않고 창고에 넣어두고 안 줬어요. 대신 유통기간 지난 과자랑 빵을 줬어요. 라면도 그렇고.”

태어난 뒤 47년 동안 밖에 나가본 적이 거의 없다는 윤석도 씨(47)는 “어머니가 살아 생전 조금이라도 덜 힘들었으면 하는 마음에 스스로 시설에 왔다”고 밝혔다. 그는 요즘 시설 민주화를 위해 요양원에서 서울시청 앞까지 3시간이 넘는 길을 거의 매일 오가며 농성에 참여하고 있다.

“농성에 참여하니까 원장이 가족에게 연락을 했대요. 걱정된다고, 놀라서 찾아온 형에게 내가 말했죠. ‘좋아지기 위해서 한다’고. 사실 나는 여기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어요. 집도 없고, 큰 형님은 63살이니 나이도 있으시고, 그렇지만 그걸 두려워서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해야 해요. 나도 시설에서 나와서 자유롭게 살고 싶지만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활동보조 몇 시간으로는 도저히 살 수가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시설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나를 고쳐야 하나요, 사회를 고쳐야 하나요?”

“나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사람들 중 반이 장애인이었다면 휠체어를 타고 다녀도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 거라고. 혹 모두가 장애인이고 몇몇만 비장애인이었다면 오히려 비장애인이 창피를 당했겠지요?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회는 장애인을 받아들이려 하지 않아요. 사회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나는 배우지도, 일하지도, 연애를 하지도, 평범하게 살지도 못하고 시설에 사는 거예요. 나를 고쳐야 하나요? 사회를 고쳐야 하나요?”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생활인 중 가장 나이가 어린 김현수 씨(33) 역시 시설에서 생활한 지 어느덧 20년이 넘었다. 9살부터 시설에서 살아왔다는 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누워서 지내야만 하는 시설이 너무 싫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부모는 “시설에 가지 않으면 어디서 먹고 살거냐”라고 말하며 강요했고, 녀석치 않은 집안이었지만 입소금은 2000만 원이나 내야 했다. 집에서는 “많은 돈을 냈으니 얌전히 살아라”라고 말했다.

8년 전쯤, 자립 생활을 해나가는 장애인들을 알게 된 그는 이렇게 지낼 수만 없다는 생각에 한 직업학교에 지원했다. 그러나 학교 측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소지해야만 입학할 수 있다며 그를 받아주지 않았다. 김현수 씨는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지만, 여기서 하는 일은 잘 할 수 있으니 지켜봐 달라”며 사정을 했지만 결국 필기시험을 풀지 못해 “누가 중학교 안 다니라고 했냐”는 핀잔만 들어야 했다고 한다.

그는 “못 배우니까 배우고 싶어서, 남들처럼 일도 하고, 돈도 벌고 싶어서 간 거였는데 라면서 엄마에게 원망을 했다”라며 “결국 엄마에게 부탁해 다시 석암요양원에 들어올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선진국가? 우리는 아직 후진국에서 사는 것 같은데...”

(또 프레시안) 2008년 4월 11일. “나를 고쳐야 하나, 사회를 고쳐야 하나?”

2 무엇이 문제일까?

1. 시설에 대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경험담도 평가도 감정도 좋습니다.
2. 인권침해도 시설 비리도 없는 정말로 깨끗한 시설이 있다면 들어갈 마음이 있습니까?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시설과 시설이 아닌 어딘가 가운데 당신이 살고 싶은 곳은 어디입니까? 당신이 살고 싶은 곳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을 말해봅시다.

3 함께 풀어 볼까요?

에바다 복지회 재단측의 비리와 인권유린이 세상에 처음 폭로된 것은 96년.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도 옛 재단의 횡포 속에 에바다는 완전한 정상화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에바다’의 비극은 사회복지시설이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전락하면서부터 이미 예정되었다. 사유화된 시설은 온갖 차별로 멍든 사회적 약자들을 ‘도구’ 삼아, 재단의 배를 불리는 폐쇄된 감옥으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2, 제3의 에바다가 또 다른 외딴 섬으로 어딘가에 존재하고 있을지 모를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무연고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정신의료 기관 수용’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불과 얼마 전의 일이다.

그동안 사유화된 사회복지시설의 반인권적 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많은 해법들이 제시되었다. △시설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이 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방안 △시설 보호의 필요여부와 기간 등을 심사하는 입·퇴소심사위원회의 상설화 △시설 이용의 선택권을 이용자에게 부여하는 ‘바우처 제도’ 도입 △정부재정 지원 방식을 시설별 지원에서 개인별 지원으로 변경하는 방안 등. 이같은 다양한 대안들이 현실에 제대로 적용된다면, 더 이상 강제로 시설에 수용되거나 폐쇄된 시설 내에서 인권유린을 당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해법들은 어디까지나 사회복지 ‘수용’ 시설의 온존을 전제하고 있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보자. 왜 장애인, 노숙자, 노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이 ‘수용’돼야 하는가?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씨는 “그들이 수용되는 것을 바라는 것은 ‘정상인’임을 자처하는 사회 구성원들의 편견 때문이며, 이는 곧 보이지 않는 폭력”이라고 말한다.

수용시설이란 애초에 ‘사회방위’ 즉, 사회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위협세력을 격리시켜야 한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찬진 변호사는 “수용시설에 입소하는 것 자체로 이미 인권침해가 시작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곧, 사회복지시설 문제의 근본적인 대안은 그것의 ‘폐기’인 것이다. 남구현 한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격리되어왔던 이들이 어떤 차별도 받지 않고 사회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남은 과제는 그러한 사회적 조건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법을 찾고 실행하는 것이다.

나는 독립을 꿈꾼다

장애, 그 가운데서도 중증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은 대한민국 사람 평균치의 삶과 아주 많이 다릅니다. 나이가 삼사십이 훌쩍 넘을 때까지 늙은 부모의 뒤통다끼리를 받으며 집 안에서 살아가거나 사회복지시설에 들어가 같은 옷, 같은 사람, 같은 일상을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물론 아름다운 다른 삶도 있겠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신의 의지대로' 기쁘게 살아가지 못하는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삶입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골방과 시설이 아닌 다른 삶을 선택할 수 없는 것일까요?



1 함께 읽어 보아요

자립생활에서 자립생활부부로... 자립생활 부부, 세상을 펼치다

지영씨와 난 이미 요양원 시절부터 결혼을 약속한 사이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녀의 체험홈 입소 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함께 집을 구하고 결혼할 것이라 생각했다. 그런데 뭔가 부족하다고 했다. 그래서 다투기를 여러 번, 한번은 그녀가 헤어지자고 했고, 난 도대체 왜 그러냐고 했지만 그녀는 끝내 말해 주지 않았다. 그녀는 "너는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가르쳐줘야 하는 거야!"라고 화내며 전동휠체어를 물고 휘 가버렸다. 우리 관계가 삐걱거리자 어떤 친구가 물어봤다. "너, 혹시 프로포즈는 했냐?" 바로 그거였다. 프로포즈!

그녀는 나의 청혼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도 난 그런 것을 생각하지도 못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이 청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난 100송이 장미를 주문해놓고 내 마음을 적은 글을 끼워서 다음날 아침 그녀가 살고 있는 체험홈으로 배달되게 했다. 꽃과 글을 받은 그녀, 매우 기뻐하는 모습이란.....

집을 구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다. 우리 두 사람 전부 전동을 타야 하기에 꼭 1층이어야 했고 엘리베이터가 있는 곳이어야 했다. 그리고 구청의 전세자금을 받아 돈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호락호락 방을 내주지 않았다. '장애인'인 것 자체가 문제였다. 체험홈 입소 기간도 거의 끝나갔다. 우리는 속이 타기 시작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녀가 병원에 입원해 수술을 받아야 했다. 요양원 있을 때 부모의 부주의로 그녀의 왼쪽 골반이 탈골되었다는 것이다. 여태껏 모르다가 우연한 기회에

이 변호사는 "단계적으로, 대규모시설을 그룹홈 같은 소규모 형태로 전환하면서 탈시설화해야 한다"며, "기존 대규모시설을 개별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소규모 그룹홈으로 분가하고, 대규모 시설은 개방된 지역복지센터로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소외된 사람들이 다시 사회 속에서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양한 재활·자활 프로그램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이 변호사는 "사회 주변부로 떠밀려 나오는 사람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사회전반에 걸친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인권하루소식 2281호〉 2003년 2월 22일, 허혜영, "사회복지시설, 닫힌 문을 열어서"

4 실천하기

1. 시설비리에 맞서 투쟁하는 사람들을 찾아가 응원하고 시간을 내어 함께 싸워줍니다.
2.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자립생활의 기쁨', '지역사회의 기쁨'을 전파하고, 더디더라도 자립을 준비할 수 있게 알고 있는 정보를 꼭꼭 나눠줍니다.
3. 시설 비리와 시설 내 인권 침해로 고통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에 신고합니다.

검사를 받다가 발견된 것이다. 어느 날 피노키오 소장님과 내가 그녀의 체험홈에 모여 낙담하고 있을 때, 키가 작은 아저씨가 체험홈으로 들어오셨다. 그분은 장애인 콜택시를 운전하는 기사인데 지나다가 체험홈 불이 켜져 있어서 들어오셨단다. 우리와 너무나 잘 알고 친숙한 분이셨으며 이 동네에서 오래 사신 분이였다.

기사님은 우리들의 어두운 표정을 살피시더니 물으셨다. "왜 그리 표정들이 어두워? 무슨 일이야?" 우리들은 집구하는 문제를 상의 드렸다. 그러자 기사님은 활짝 웃으시며 "마침 잘 됐네! 우리 집 1층에 문구점 하던 집이 나갔는데, 거기 들어와 살아!" 실로 명쾌한 대답이었다. 내친 김에 우리는 그 집으로 가봤는데 입구에 약간의 턱이 있는 상가 건물이었지만 평수도 15평이라 원룸으로 개조하면 그런대로 살만할 것 같았다. 이미 구청에 영세민 전세자금을 신청해 놓은 터라 그녀는 일단 안심하고 병원에 입원할 수 있었다. 병원비 또한 만만치 않았지만 다행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수술비 지원을 해줘서 끝반 뼈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며칠 뒤, 구청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신청이 받아들여졌다는 통보를 받았다. 그녀는 이미 입원했고 수술날짜 또한 받아놓은 상태였다. 그녀의 승낙을 받아 혼인신고도 미리 했다.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혼인신고를 해야만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또다시 문제가 발생했다. 구청에서는 통과됐지만 그만 은행에서 제동이 걸렸다. 다른 것은 다 문제가 없었지만 그 집의 땅이 시유지라는 게 문제였다. 그래서 H은행에선 퇴짜를 당했고, 내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출을 못 받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했다. 그녀와의 관계도 나의 자립생활도 전부 종지부를 찍어야 할 판이었다.

그래서 무작정 K은행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구청에선 허락했는데 당신들이 뭔데 대출 안 해주냐고 마구 따졌다. 그 은행을 가기 전, 구청에 가서 물어보니 구청에서 대출을 허락해줘도 은행은 별별 핑계를 대고 안 해주려고 한다고 했다. 실제로 구청에서 대출을 허락해도 그 중 절반정도가 은행 대출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적잖게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그리고는 다시 한 번 서류를 검토해 볼 테니 돌아가서 기다리라고 했다. 거의 2시간을 은행직원들과 싸웠다. 집회 장소에 나가도 안전했던? 내가 그렇게 거칠게 돌변할 줄은 나조차도 몰랐다. 센터로 돌아가는 길에 성당을 들렀다. 그 성당은 계단이 있어서 성당 건물 안으로는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당 마당을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아 그곳에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기도의 응답이었을까? 며칠 후 은행으로부터 1000만원을 대출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집주인과 전세 2000만원에 계약하기로 약속해 2000만원을 신청했지만 반밖에 받지 못했다. 500만원을 간신히 마련하고 집주인에게 매월 10만원씩 주기로 하고 계약을 성사시켰다. 간신히 집을 마련했고 그녀의 수술 또한 잘 되어 이제 퇴원할 날만 남았다. 집 개조 또한 후원을 받았다.

유리로 된 입구를 벽으로 막고 문을 냈다. 문 앞으로 완만하게 시멘트를 발라 경사로를 만들고 2평 규모의 다용도 실, 그 앞에 다시 시멘트로 경사로를 만들고 두 개의 칸을 터서 한방을 만들어 장판을 깔았다. 화장실도 내 몸에 맞게 변기를 낮추는 공사를 했다. 화장실 자체가 방보다 낮았기 때문에 콘크리트로 두겹게 발라 변기의 절반까지 올렸다. 드디어 파란색 대문의 우리 집이 만들어 졌다.

우리 부부는 2004년 12월 13일, 입주했다. 입주 후, 제기동이란 동네에 터전을 잡고 여느 부부들처럼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고, 쇼핑도 하고, 싸우기도 하며, 어떨 땐 이혼 위기까지 가기도 했고, 닭살커플처럼 공개키스도 했다. 지지고 볶고 싸우며, 또 화해하다가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부부로 알려져 유명세도 치렀고 덕분에 방송출연도 했다.

자립생활
가능할까?



도전해 보는거야!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우리의 삶을 부러워하며 우리의 삶을 따라 살기를 원한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녹록한 환경은 아니다. 여전히 장애인들을 교육받지 못하고 있고 직업의 기회에서도 여전히 차별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많은 장애인들이 시설에 갇혀 살고 있고, 여전히 집밖에 나가기 힘들다. 이것이 우리나라의 장애인을 둘러싼 현실이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바꿔 나가려 한다. 우리 부부 뿐만 아니라 적잖은 중증장애인들이 이 척박한 환경을 바꾸기 위해 싸우고 있다. 언제쯤이면 중증장애인들도 평범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올까?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투쟁들이 필요할까? 우리 부부가 지역사회에 사는 것, 지역사회에 살며 사람들과 삶을 부딪치며 치열하게 사는 것 자체가 세상을 바꾸는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싶다.

(프로메테우스) 2007년 1월 23일, 박정혁, "자립생활에서 자립생활부부로..."

2 무엇이 문제일까?

1. 어디서, 누구와 살고 있는지 이야기해봅시다. 당신이 원하는 곳에서 살고 있습니까?
2. 원하는 곳에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이야기해봅시다.
3. 정혁 씨의 글에서 보듯 아직까지 '자립생활'은 달콤하지만 엄청난 고생이 따르는 일입니다. 어떤 집에서 누구와 어떻게 살고 싶은지 이야기해 봅시다.

3 함께 풀어 볼까요.

자립생활 정책을 통한 인간다운 삶의 필요성

좌동엽(노들장애인야학교사)

인간이라면 누구나 자기 삶에 대한 욕구가 있다. 자신이 스스로 의식주를 해결하고 기본적인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 또한 더 나아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요구할 수밖에 없는 삶에 대한 권리가 모든 이들에 대해 과연 평등한 지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왜 똑같이 이 사회에 존재하는데 중증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인간이라면 누릴 수 있는 아주 당연한 권리를 포기 당한 채, 사회적 낙인을 당하고 수용시설에 반강제로 입소되면서 죽을 때까지 갇혀 있게 되는가하는 심각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그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러한 비이성적인 행위를 아주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사회 분위기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장벽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 수용 중심의 시설 정책과 재활패러다임적인 장애인정책에 맞서 2000년대에 이르러 장애인 단체들을 중심으로 자립생활 패러다임적인 정책 변화를 요구하는 자립생활운동들이 치열하게 전개되어 왔다.

물론 한국에서 일어나는 최근의 상황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자립생활운동은 원래 서구에서 시작되었는데, 미국 휴스턴에 있는 ILRU(Independent Living research utilization)는 자립생활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은 장애인이 의사결정과 일상생활에서 타인에 대한 의존을 최소화하고 자신들의 생활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다. 자립생활은 자신의 신변 처리 같은 일을 스스로 관리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자기결정에 충실한 의사결정과 타인에 대한 심리적·신체적 의존의 최소화 등이 포함된다."

여기서 자립생활 이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들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장애인 당사자들에 의한 자기 결정권과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라는 권리적인 선언들이다. 또한 자립생활패러다임에서 지향하는 기존의 장애인 정책 관점과 다른 가장 중요한 것은 문제의 소재를 장애인 개인이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을 둘러싼 물리적·사회적 환경으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사회 전반에 편재된 사회 통제 메커니즘을 포괄한 환경에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의 자립생활운동에 대한 평가는 이중적이기도 한데 그것은 탈시설에 의한 자립생활운동의 일정 부분이 장애인시설과 관련된 사회복지관련 지출을 감소하려는 자본의 이해관계와 맞아 떨어진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반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장애인 정책과 제도적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부적인 사항에서는 자립생활 이념적인 요구와 정책들이 반영될 수는 있지만 전반적인 기존의 장애인 정책의 기본 틀이 바뀌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가장 큰 이유로는 앞서서도 밝혔듯이 정책의 변화가 필연적으로 예산 지출에 대한 필요까지 수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서구에서 출발한 자립생활에 대한 이념적 토대가 한국에서의 자립생활운동에 많은 기여는 하였지만 그렇다고 우리의 장애인에 대한 정치·경제적인 상황은 서구와는 다르기 때문에 한국 상황에 맞는 탈시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자립생활운동의 이념과 방향이 재정립될 필요가 있다.

어쩌면 불가능할 지도 몰라...
괜히 나왔나봐...



그냥 계속 가는거야!
머물러 있는 것보다
낫잖아?



4 실천하기

1. 대한주택공사를 비롯한 주택 관련 기관이나 회사에 장애인 의무 입주 비율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주택청약을 보는 등 저렴한 가격에 집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적극적인 자세로 임합니다.
2. 시설에 가야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숨기지 말고 떠벌려야 하며 주위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구합니다.
3. 장애인 접근권이 갖춰지지 않는 방을 보고 왔거나 집 주인으로부터 '장애인이어서 방 주기 싫다'는 이야기를 듣고 온 친구가 있으면 위로해 줍시다.
4. 자립생활을 방해하는 문턱, 계단을 없애는 투쟁 그리고 자립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주거권, 노동권, 소득보장, 활동보조제도화 투쟁 등에 적극적으로 결합합니다.

장애가 빈곤을 부른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로, 이혼 뒤 아이 양육권을 찾아오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청계천에 노점을 차렸던 장애여성이 있습니다. 장애인이동권 쟁취, 최저생계비 현실화 같은 생존을 위한 기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하다 2002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몸으로 세상에 저항했던 최옥란 열사를 떠올려봅니다. 그리고 저항마저 학습하지 못한 채 고통을 안고 살아가는, 장애와 빈곤으로 고통 받는 수많은 이들의 삶을 함께 생각해봅시다.

1 어떤 일이?

강서구청 “고인에게 충분히 배려, 안타깝다”

1급 장애인 장애수당 월 9만원, 생계곤란 호소

1급 지체장애인 주모씨(53)가 18일 밤 강서구청 현관에서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강서구청은 “매우 안타깝다”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면서도 “구청으로서 고인에게 최대한 배려해왔다”고 해명했다.

강서구청 사회복지팀 관계자는 “고인은 지난 2년간 수시로 구청장과 명담할 것을 요청해 년 5~6회 정도 직접 면담을 한 적이 있고, 최근에도 설 연휴 전에 구청장을 면담한 바 있다”며 “면담에서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생계비 지원을 요구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고인은 자신의 처지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종종 보였고, 면담 과정에서 수차례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했었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애인 기초생활수급보장에 따른 법적 지원 외에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지원금을 고인에게 좀 더 많이 배정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배정해 준 3백만원 상당의 전동 휠체어를 포함 지난 2년간 6백45만원을 지원해왔다”고 밝혔다.

구청은 이밖에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무료 영구차를 지원하고 장제급여로 40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지원하고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요청해 긴급 후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체1급 장애인 장애수당 월 9만원

한편, 주씨가 별도의 복지기금 외 2004년 한해동안 국가로부터 받은 법적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로 받는 생계비 월 67만6천8백40원이고 장애수당은 월 9만원이었다. 이밖에 고등학교에 다니는 딸에 대한 교육급여가 연간 1백69만원, 한 차례 긴급구호 지원 22만3천원을 받았다.

즉 주씨는 고등학생인 딸과 함께 생활하며 월 92만6천원 가량으로 생활을 해온 셈이다. 특히 1급 장애인으로서 받은 추가지원액은 장애수당 9만원에 불과하다. 실제로 많은 장애인들이 노동기회가 보장돼 있지 않은 가운데 현재의 장애수당으로는 생계유지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특히 주씨와 같은 가정의 경우 더욱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씨는 원래 용접공으로 일했으나, 지난 85년 사고와 질병으로 장애인이 된 후 두 딸을 홀로 키우며 어려운 생활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씨의 빈소가 차려진 강서 지역 장례식장의 지하 빈소로 내려가는 길은 비좁은 계단으로 돼 있었다. 이에 대해 역시 장애인인 주씨의 지인 한 명은 “세상이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까지 장애인은 버림 받은 거나 마찬가지”라며 “여기 휠체어를 타고 다니던 양반이 저승길 가는 곳도 계단밖에 없지 않느냐”고 눈시울을 적셨다.

〈프레시안〉 2005년 2월 19일. “강서구청 “고인에게 충분히 배려, 안타깝다”

2 무엇이 문제일까?

1. 주 씨가 구청에 가서 생계비를 높여 달라고 요구한 것은 도덕적으로 해이한 일일까요? 주 씨가 미안해해야 하는 일일까요?
2. 당신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3. 당신이 하고 싶은 일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 지원이 있으면 그 일이 가능할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해봅시다.

3 함께 풀어 볼까요

장애인 수급자의 최저생계 보장과 자활지원을 위한 정책적 제안

저소득 장애인의 생계보장

① 각종 급여에 대한 자세한 정보의 제공

생계급여액이 결정되는 기준과 교육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의 급여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및 제공 방법 등에 대한 이해 정도는 장애인 수급자들이 부당하게 책정된 급여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로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이 된다.

그러나 대다수의 장애인 수급권자들은 자신이 낮은 급여를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낮은 급여액이 결정되는지를 모르고 있다. 예컨대, 소득이 전혀 없는 실업장애인이 예전에 공공근로를 통하여 얻은 소득이 계속 추정소득으로 잡혀 급여액이 낮게 책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기준과 지침에 대해 잘 몰라 낮은 급여액을 그대로 받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장애인 수급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급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관련 기관의 종사자들은 장애인 수급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② 현행 추정소득 부과 개선

추정소득의 부과는 근로능력이 있지만 취업 및 근로여부가 불투명하여 소득을 조사할 수 없으나 주거 및 생활실태로 보아 소득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실업자나 장애인 등은 추정소득 적용대상 예외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에게까지 상당수의 추정액을 부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조사시점에서 공공근로를 수행했던 수급자들이 지속적인 공공근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소득 50만원을 추정소득으로 산정함으로써, 급여액의 상당부분이 감소되거나 아예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실태는 비정규직, 일용직 등 소득이 불안정한 계층에게도 추정소득을 과도하게 부과함으로써,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일정액을 소득으로 인정하여 낮은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 당시의 비정기 소득이나 공공근로를 이유로 추정소득 혹은 소득을 산정해서는 안 된다. 현행 지침 내용을 철회하거나 보완하여 수급자의 실제소득만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최저생계비의 조정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시행되기 이전부터 최저생계비 산출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었으며, 시민·사회단체들은 최저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왔다. 전반적인 최저생계비의 현실화와 함께, 장애인 수급자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감안한 "장애인 최저생계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생계비는 비장애인 생계비의 120~150%까지 지출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장애가 심할수록 지출되는 추가생계비는 높다.

따라서 장애인 수급자들의 경우,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분에 한해서는 최저생계비용에 포함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책이 만들어져야 한다.

④ 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제도의 활성화

장애인 수급자 최저생계비의 책정이 제도적으로 어려울 경우, 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제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본 연구결과 장애인 수급자의 36%만이 장애인 수당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추가 생계비를 고스란히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문제로 남아 있다.

따라서 장애인 수당, 장애아 부양수당, 특별 장애인 부양수당 등의 활성화로 장애인에 대한 현금 지급 체계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이는 장애인 수급자의 생활수준의 하락을 예방하고 장애인의 최저생계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⑤ 장애인 수급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기능의 확대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장애인 수급자에 대한 관련 정보의 제공은 장애인 수급자의 수급권을 확보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관련 기관에서의 인력부족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복잡함으로 인하여 제도에 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은 많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부족한 상담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민간기관의 자율성과 비판적 감시기능은 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애인 수급자의 억울한 점을 개선하는 데 적절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4 실천하기

1. 현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수급비와 생활비로는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자주 많이 이야기합시다.
2. 실효성 있는 장애인연금법 제정,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 투쟁에 적극적으로 참가합시다.

장애와 인권을 말하다

앞 장에서 '장애'를 만들어내는 사회에 저항하는 훈련을 했다. <장애와 인권을 말하다>에서는 사회가 '장애'와 '장애운동'을 바라보는 시선을 해석하고자 한다. 물론 대부분이 우리를 가두는 '나쁜' 시선에 해당한다. 장애인 차별을 불러 일으키는 몸쓸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 되겠다. 툭 까놓고 자기의 무지와 편견을 드러내고, 자기 안에 숨어 있는 자본주의, 보수, '명박스러움'을 적나라하게 들여다 보는 시간이면 좋겠다. 그래서 더욱 단단한 활동가, 운동가, 사람이 되면 좋지 않을까?

또한 이 사회에서 이야기 하는 기득권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 장애인 민중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작은 고민들을 이 장에서 함께 나누었으면 한다.



인권

장애가 인권이 마려워!

학습목표

- 인권에 대해서 이해하고 장애인 문제와도 관계되어 있음을 알게 한다.
- 장애인 문제를 인권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함을 깨닫게 한다.



1 주제 이야기

우리는 장애 관련한 집회에서 '장애인도 인간이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는 구호를 자주 외치곤 한다. 장애인이 인간이라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이 사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이 구호로서도 왜곡된 사회적 차별을 바로 보여 주는 것이다. 역사적으로도 장애 또는 장애인이라는 개념은 사회적 관계와 차별 속에서 등장했고 존재해 왔기에 장애 문제를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권의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인권이 무엇인가라는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세계인권선언(유엔총회가 야만적인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에 채택한, 억압과 차별에 맞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상세히 진술한 최초의 기록) 전문 일부를 인용하여 인권을 이야기 하고자 한다.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갖는다. 인간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제2조는 차별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보편적 존엄성을 확인한다.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 적 또는 사

인권



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이 전문을 통해서 인간의 권리가 본래적인 것이고, 보편적이며,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며 양도할 수 없는 것을 밝힌다. 하지만 세계인권선언, 이 자체로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점과 권리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제시하지 못한 점, 시민·정치적 권리에 비해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영역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다시 돌아와서 장애인도 똑같은 인간이고 따라서 그에 따른 기본적인 권리를 이 사회에 주장할 수 있으며 그것은 본래적이고 보편적이며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어떠한 종류의 조건이나 차별 없이 누려야 할 인간의 당연한 권리인 것이다.



2 생각을 드러내자!

1)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적 차별은 왜 일어난다고 생각하는가?

2) 내가 생각하는 인간의 권리, 즉 인권이란 무엇인가?

3) 자신이나 주변에서 인권이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자.

3 치열하게 논쟁하자!



1) 쟁점 만들기

서로의 이야기들 속에서 공통적인 이야기들과 차이가 나는 이야기들을 모아 보자.

공통적인 이야기

차이가 나는 이야기

2) 공통적인 생각들에 대해서는 서로가 공감하고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자의 입장을 갖고 토론해 보기로 하자.

가. 각자의 입장을 갖고 각자 주장하고 상대들을 설득도 해 보기로 하자.

나. 차이가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한 차이가 발생했는지 잠시 생각을 갖고 차이나는 이유를 찾아보기로 하자.

다. 토론과정을 걸쳐 공감할 수 있는 부분과 그래도 자신이 생각하는 주관들을 다음에 적어 보자.

4 생각해 보기



1) 자신의 경험 속에서 전에는 생각하지 못하였지만 다시 발견했던 인권침해의 경험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

2) 자신이 실제로나 생각으로도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였던 경험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

3) 인권의 중요성과 소중함을 깨닫고 지키는 것 또한 어려운 것임을 생각해 보기

장애는 개인의 문제다?

학습목표

- 장애인 문제(차별)가 개인이나 가족이 책임져야 할 문제가 아님을 알게 한다.
- 장애인 문제(차별)가 사회적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것임을 이해하고 그것을 깨뜨리는 것 또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한 것임을 깨닫게 한다.



1 주제 이야기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장애인들은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가슴 아픈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장애로 태어난 것도 자기의 운명입니다. ...자기의 부주의로 장애가 된 것을 사회적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지나친 요구이자 국민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강원 원주시 김기열 시장이 시 공무원들에게 훈시한 말 가운데 일부이다. 당시는 원주의 중증장애인들이 장애인 이동권 보장, 활동보조인 서비스 생활시간 보장,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 마련 등을 요구하며 시청 앞에서 한 달 이상 노숙농성을 하던 때였다. 김 시장의 말은 사실상 장애인들의 요구에 대한 답변이었던 것이다.

장애를 가지게 되는 것은 자기 운명이다? 맞다고 치자.

그러나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는 그 어디에도 없다. 장애인이 자신의 장애로 인해 사회적으로 배제되고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장애인을 배제하는 비장애인 중심의 사회적 환경으로 인해 차별과 배제가 가속화되는 것이며 그리하여 장애는 비참한 그 무엇이 된다. 장애인 차별은 정확하게 사회적 책임의 문제인 것이다.

비장애인들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타고 다니는 대중교통인 지하철과 버스를 자유롭게 타기 위해 중증장애인들이 온몸에 쇠사슬을 묶고 목숨을 걸고 지하철 선로를 점거하며 이동권 보장 투쟁을 해야 했다. 그 결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만들어졌고 장애인의 이동권이 권리로 명시됐다.

김기열 시장은 ‘권리’가 무슨 뜻인지 모른단 말인가? 국어사전을 찾아보라. ‘권리

는 어떤 일을 행하거나 타인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이나 자격'이라 규정하고 있다. 이동권을 법률로 명시했다는 것은 장애인들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당연히 '요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그런데 김 시장은 원주 장애인들의 정당한 '국민된 요구'를 무시한 것도 모자라, 이들을 '국민된 도리도 모르는' 무도한 집단으로 매도하고,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국민이 부여한 자신의 의무'를 내팽개쳐버렸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에 대해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자신을 치장했지만, 이는 결국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으로 전락시켜버린 것이다. '권리'를 '시혜'로 변질시켰다.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해야 할 대중교통에서 왜 장애인은 배제돼야 하는가. 스스로 먹고 씻고 입고 이동하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 감옥과 같은 수용시설에서 격리되지 않고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활동보조인 서비스가 왜 자신들이 부담해야 할 몫인가. 그것은 사회적 책임이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필요하다. 사회적 약자를 위해 예산을 부담하기 싫다는 것인가. 천박하고 냉혈적인 자본의 칼을 '국민된 도리'라는 말로 은폐하는 것이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가 전쟁 수행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대인보다 먼저 장애인을 가스실로 보내버린 역사를 이 사회는 기억하고 있는가. 장애인의 문제를 그렇게 처리해버리는 것이 깨끗한가. 승전국인 미국조차도 장애인이 겪어야 했던 비참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장애인에 대한 태도는 여전히 어디서나 시혜와 동정, 지역사회에서의 격리와 배제라는 차별로 재생산되고 있다.

원주시장의 말은 어쩌면 이 사회가 장애인을 생각하는 전반적인 의식일지도 모른다. 그래서 소름이 끼친다. 야만의 사회다.

- 박경석(노들장애인야학 교장) 한겨레신문 기고 글 中



2 생각을 드러내자!



1)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차별)들이 누구로부터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가?

2)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차별)들을 현재는 누가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3) 이러한 장애인과 관련된 문제들과 사회적 차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지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이야기 해보자.

